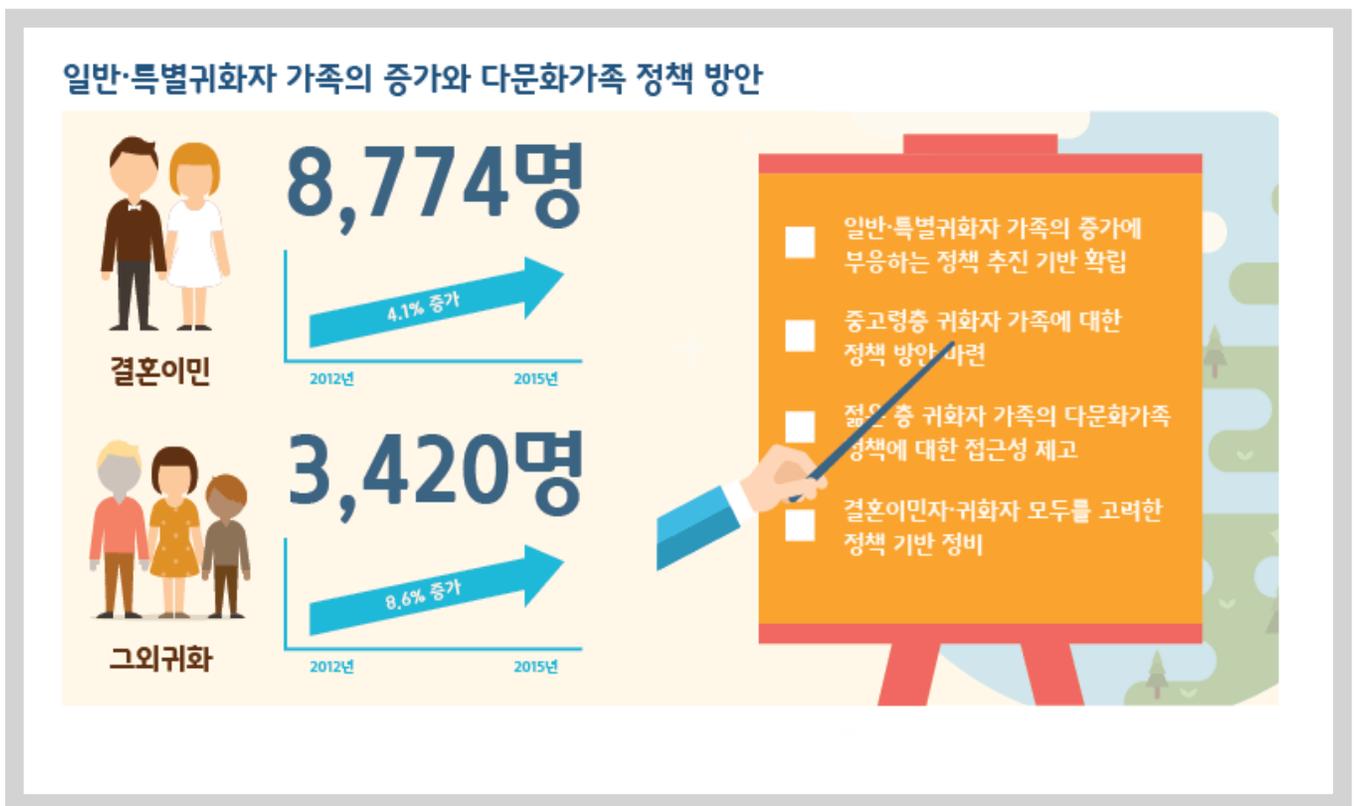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과제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Tel:02-3156-7158 / e-mail:yskim@kwidimail.re.kr)

일반·특별귀화자 가족의 증가와 다문화가족 정책 방안*

“ 본 연구에서는 엄연히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기존 정책에서는 주변화되었던 일반, 특별귀화자 가족의 현황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음. ”



- 흔히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현행 법제도상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이외에 가족원 일부 혹은 전부가 일반, 특별 귀화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 최근 들어 국제결혼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특별귀화자, 일반귀화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가족원의 일반, 특별 귀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된 이들이 전체 다문화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은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을 기준으로 정책방향과 의제가 설정되고 정책 수단이 고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일반, 특별귀화자의 성격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보완이 시급함.

1. 배경 및 문제점

♡ 현행 법제도상 다문화가족의 범위: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일반·특별귀화자 가족.

- ▶ 흔히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현행 법제도상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이외에 가족원 일부 혹은 전부가 일반, 특별 귀화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후 가족원 일부 혹은 전부가 특별귀화나 일반귀화를 한 이들 역시 법제도 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음.

♡ 다문화가족 정책에 있어 일반, 특별귀화자 가족의 주변적 위치.

- ▶ 법제도적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지만,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도 일반귀화자, 특별귀화자 가족은 주변화 되었던 것이 현실임.
-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일반, 특별귀화자 가족의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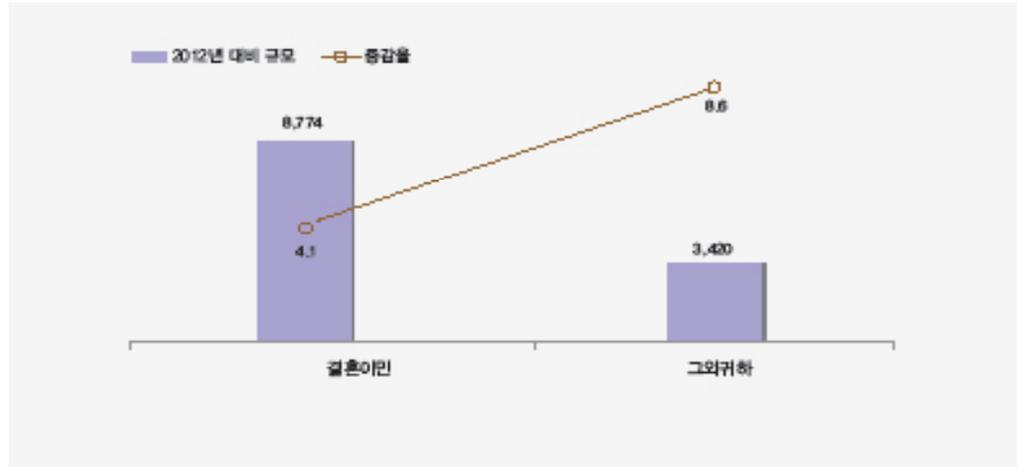
- ▶ 2012-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최근 들어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보다 그 외 귀화자의 증가세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 국제결혼 건수의 감소로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은 증가세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특별귀화, 일반귀화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되는 이들은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임.

④ 일반, 특별귀화자의 다양한 성격

-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생활 시작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이 된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과 달리 일반·특별귀화자는 오랜 한국생활을 거친 후 귀화와 함께 법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한국생활 경험과 귀화 동기, 연령대와 가족주기,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등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2012-2015 유배우 결혼이민자/그외귀화자 규모 변화

(단위: 명,%)



- ▶ 한편으로 부모의 국적회복 이후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특별귀화를 한 중고령층 귀화자 집단이 있음.
- ▶ 다른 한편으로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일반귀화를 선택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귀화자들도 있음.
- ▶ 아직까지 수적으로는 특별귀화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특별귀화 뿐 아니라 일반귀화까지 귀화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 또한 국적회복자의 자녀로 특별귀화가 가능했던 세대는 지나가고 있는 반면 일반귀화 거주기간 요건(5년)을 갖출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후자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④ '은퇴' 를 앞둔 중고령층 '동포' 귀화자들의 상황.

- ▶ 중고령층 특별귀화자들은 '동포인력' 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해 부모세대의 국적회복을 계기로 형제 자매, 그리고 그 자녀세대까지 대부분의 가족이 연쇄적으로 특별귀화를 한 상태임.
- ▶ 고향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부모, 친지들 속에서 성장했으며 '동포'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음.
- ▶ 이들에게 '다문화가족'은 '외국인'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동포'인 자신과는 무관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 이들의 관심은 노후 경제생활과 건강 문제에 쏠려 있음. 또한 오랜 기간 한국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 아닌 한국인들과의 관계와 협력 경험이 부재한 만큼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 장애,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용자 간 갈등의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음.

30-40대 귀화자의 자녀 성장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의 혼선.

- ▶ 30-40대의 비교적 젊은 귀화자들은 자영업이나 전문직 등에 종사하면서 중장년층 귀화자들 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특히, 일반귀화자들은 유학생이나 전문인력, 사업가 자격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해 안정적 직업 등 경제적 자립 능력 요건을 갖춘.
- ▶ 부모의 국적회복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귀화한 이들과 달리, 자신들의 직업 경력이나 사업 경영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대해 특히 큰 기대를 갖고 일반귀화를 선택했음.
- ▶ 30-40대 귀화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의 관계는 개개인의 상황별로 다를 정도로 매우 복잡함.
- ▶ 이민자로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녀 역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었던 이들은 귀화 이전부터 스스로를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관련 지원을 받기도 했음.
- ▶ 30-40대 귀화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의 관계는 개개인의 상황별로 다를 정도로 매우 복잡함.
- ▶ 이민자로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녀 역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었던 이들은 귀화 이전부터 스스로를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관련 지원을 받기도 했음.
- ▶ 제도적으로는 '그 외 귀화자 가족'이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국제결혼 부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30-40대 특별귀화자-결혼이민자 부부 역시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형성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임.
- ▶ 이에 비해, 한국어 등 적응의 어려움이 크지 않은 채로 가족원 모두 상당기간 '외국인'으로 살다가 귀화한 이들은 귀화 이전에는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음. 귀화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녀 성장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정책과의 관계가 일부 재구성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다문화가족' 정책,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아닌 자신과 정책 간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국제 결혼' 하지 않은 자신들이 과연 '진짜 다문화가족'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음.

3. 정책제언

3.1 제안 1) 일반·특별귀화자 가족의 증가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평가, 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다문화가족의 구성과 정책대상 집단의 변화를 주요 의제로 고려.
-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 등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부집단의 정착, 자립, 사회통합 과정에 대한 점검, 정책의제 발굴, 기존 정책의 관계 형성 장애요인 점검, 개선방안 마련.
- ▶ '결혼이민자' 개념을 '결혼이민자·귀화자' 혹은 '이민자' 개념으로 대체.
- ▶ 사각지대 발생 문제 점검, 개선조치 마련.
- ▶ 법에서 규정된 대상 범위에 적합한 방향으로 실제 사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부적합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조치 실시.
- ▶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 운영 방식 정비.
- ▶ 센터 평가지표에 '이용자의 다양성 및 포괄성' 지표 추가.

④ 제안 2) 중고령층 귀화자 가족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

- ▶ 노후생활에 중요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통로 마련.
- ▶ 귀화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시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 배포.
- ▶ 동포 다수 거주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동포단체가 공동으로 중고령층 귀화자 대상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 실시.
- ▶ 중고령층 귀화자의 노인 관련 시설 이용 요구, 장애요인 파악.
- ▶ 동포 집중거주지역에서는 자체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
- ▶ 중고령층 귀화자와 한국인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정부, 지자체 지원.
- ▶ 이민자 연령대별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행.

④ 제안 3) 젊은 층 귀화자 가족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귀화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시 일반 복지제도 정보, 다문화가족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제공.
- ▶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 등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주요 사업에서는 귀화자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 프로그램 보완.
- ▶ 귀화자 가족에 대한 인식, 성격에 대한 진행자 훈련 실시.
- ▶ 예비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시행 시 외국인 지원기관, 관련 단체나 모임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홍보, 다양한 성격의 다문화가족에게 정보 확산.
- ▶ 다문화가족이 되기 이전 '외국인'에게도 예비 학부모 교육 문호 확대.

④ 제안 4) 결혼이민자·귀화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 기반 정비.

- ▶ 법제도적인 다문화가족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상 집단을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모두 포함되도록 대상자 범위 확대.
-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지침, 센터 종사자 교육 시 법제도적인 다문화가족 범위를 핵심적으로 포함.
-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대상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
- ▶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조치 시행.

4. 기대효과

- ④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 방향에 적합한 정책 방향, 의제 개발.
- ④ 다문화가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④ 이상의 정책제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